

2006년 출산동향 분석과 정책적 함의

Fertility Trends 2006 and Policy Implications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팀 팀장

우리나라 출산율은 외환위기 이후 급감하여 2005년에 1.08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낮아졌으나, 2006년에 1.13로 증가하였다. 그 동안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최근의 증가는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고는 최근 출산율 변동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 경기와 출산율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불황은 3년 시차를 두고 2001년부터 출산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영향은 2002~2005년 기간에 가중되었는데, 이는 경기회복-고용안정-결혼-출산 의사결정-출산이행에 이르는 데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2003년부터 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에 이르러 출산 증가로 이어졌다. 2004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저출산정책도 경기회복과 어느 정도 상호작용을 하여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최근에 결혼과 출산에 관한 부정적인 가치관이 감소하였으며, 다자녀의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도 출산율 반등에 일조한 것이다. 90년대 중반 경기불황을 겪었던 스웨덴이나 일본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사회에서도 경기변동 등 외부 충격에 대해 완충 역할을 할 자녀양육의 사회안전망이 확고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1. 서론

인구 변동에 대한 인식이나 수단은 시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18세기 중상주의시대에는 정치·경제·군사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인구규모의 증가를 강조하여,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산업혁명의 모순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자, 맬서스는 1798년 인구론이라는 책자에서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 증가, 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 증가”를 주장하였다. 18세기 맬서스주의자(Malthusianism)는 가난·질병에 기인한 사

망과 범죄·전쟁 등 자연법칙에 의한 인구 억제 를 강조하였다. 19세기에 신맬서스주의(Neo-Malthusianism)는 고출산-저사망에 의해 인구가 급증하자, 피임법에 의한 인구 억제를 주장하였다. 20세기 초 여성해방론자들은 원치않는 임신 을 예방하기 위해 피임보급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는 가족계획운동으로 발전하였다.

20세기에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 전통적 가족유형 변화, 가치관 변화, 피임법 보급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보건의료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인구고령화 등이 새로운 사회적 위협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0

세기 후반에 동아시아국가들도 나타났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출산율 증가를 지향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서구의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은 수십년간 큰 변동이 없었으나, 스웨덴 출산율은 2000년 1.54에서 2006년 1.85로, 프랑스 출산율도 가족정책의 영향으로 2000년 1.87에서 2006년 2.01로 상승하였다. 미국의 출산율은 이민자의 고출산율(2003년 백인 1.7, 히스패닉 3.0, 흑인 2.4)로 2005년 2.05까지 상승하였다. 일본 출산율도 2005년 1.26까지 하락하다가 2006년 1.32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983년에 인구대치수준(2.1명)에 도달하였으며, 2005년에는 1.08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출산율이 2006년에 1.13로 증가하였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2007년 출산율을 1.25 수준으로 추정하였다. 출산율의 장기간 추이에서 단기 간 변동은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1960년 이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며, 특히 2000년대에 출산율이 급락하였다는 점에서 최근의 증가는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출산율 감소의 원인은 신 가정 경제 이론(New Home Economics theory) 방식과 가치관 변화에 기인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다. 전자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가족부양기능 변화 등 사회 구조 및 가족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다. Esping-Andersen(1990)은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책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 나라의 정치, 경기변동, 산업, 정책, 문화적 가치 등은 출산율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경기 변동은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쳐, 가족형성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이상의 맥락에서 본고는 출산동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외국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2006년 출산 증가가 장기적인 추이에서 어떠한 변곡점을 갖는가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국가들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1990년대 중반 경기불황을 겪으면서 출산율이 감소한 후, 최근에 증가세로 돌아선 스웨덴과 일본을 선정하였다.

2. 외국 사례 고찰

1) 스웨덴 사례

스웨덴의 출산율은 1900~1930년대 중반까지 4명에서 2명까지 감소하였으나, 1930년대 경제 침체기 이후 다시 상승하였다. 1940년대 중반 베이비붐 이래 출산율은 1960년대에 2.5명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1970년대에 출산율은 여성의 노동참여와 함께 동시에 주춤하여, 1970년 말 1.6명까지 감소하였다. 1980년대 스웨덴의 경제는 성장 시기로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1990년 81%까지 높아졌으며, 부모휴직기

간, 아동수당, 공보육 확충 등 가족정책의 대상 및 범위 확대는 자녀양육비용을 경감시키고 일-가정양립 수준을 높여 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Hoorens et al, 2006). 즉, 1980년대에 경제성장과 정책의 상호작용 효과로 출산율이 증가하여 1990년에는 인구대치수준에 이르렀다(Hoem, 2005).

1990년대에 스웨덴의 경제가 1930년 경기침체 이후 최악 상태를 겪으면서 출산율이 1999년에 1.52명까지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1990~1993년간 GDP는 5% 떨어졌으며, 고용수준도 약 10% 감소하였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계약직 증가 등)로 인하여 젊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찾기 어려웠으며, 그로 인해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의지가 감소하였다(Hoorens et al, 2006). 특히, 여성의 소득이 가계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맞벌이가정에서 급격한 실업률 증가는 가구의 가처분소득 감소 및 미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당시 낮은 생산과 높은 실업률로 재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로 인한 부모휴직의 소득대체율, 보육의 질 저하, 아동수당 감소 등 가족정책 범위의 축소는 직·간접적으로 양육비용을 증가시켜 출산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Hoem, 2005).

이후 스웨덴의 출산율은 여성노동참가율과 동반 회복되었으며, 2006년에 1.85까지 상승하였다. 실업률은 1990년 10%에서 2006년 5%로 급락하였으며, 여성의 노동참여는 75%로 증가하였다.¹⁾ 가족정책에 대한 사회지출은 2001년 기준으로 GDP대비 2.9%로 OECD평균을 상회하였다. 1970년대에 도입한 휴직제도, 아동수당, 보편적 공보육 등 가족정책을 강화한데다가, 양성평등의 생활화와 보편적 복지제도를 완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²⁾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을 강화하여 부의 가사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왔다.

이와 같이 스웨덴의 출산율은 경기, 고용, 정책 등과 맞물려 변동하면서 롤러코스터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Hoorens et al, 2006).³⁾ 즉, 경제부흥기에는 임금 인상과 경제사회안정대책 등이 나타나게 된다. 이 시기에 복지 수준이 증대되고 새로운 정책적 관심이 생겨난다. 이에 따라, 자녀양육비용이 감소하고, 출산율도 자극을 받게 된다. 그러나 경제불황기에는 임금 성장이 없고, 고실업률이 지속되고 복지수준이 감소하여 불안정해진다. 그로 인하여 자녀양육비용이 증가하고 사회적·경제적 불안정이 증대하여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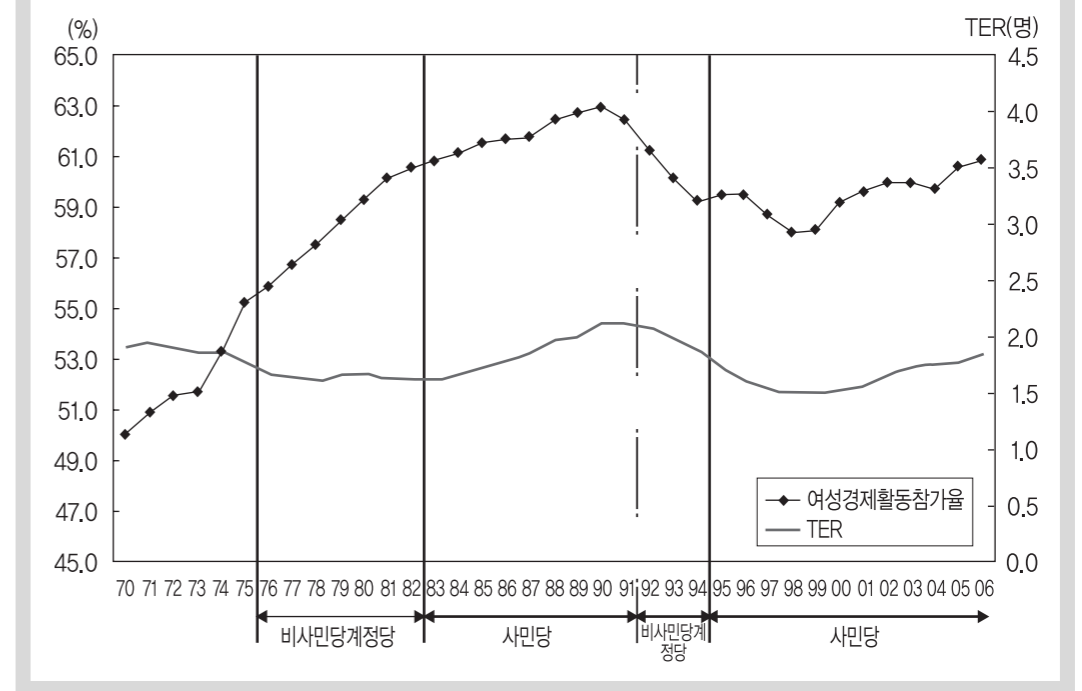
그림에서 GDP성장률과 출산율은 약 6년간

1) 스웨덴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1989~1990년 31.0%, 1995~1996년 42.0%, 2001~2002년 50.0%로 점진적으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50% 이하에서 머무르고 있다(스웨덴 통계청, Statistical Yearbook of Sweden). 이는 대학 비진학 여성의 취업 등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스웨덴의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율(2001)은 28.9%로 일본(16.9%)과 한국(6.1%)은 물론 OECD 평균(20.9%)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3) 반면, 덴마크, 프랑스 등은 90년대 노동시장쇼크와 출산율간의 연관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Hoorens et al, 2006).

그림 1. 스웨덴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출산율간의 관계, 1970-2006



시차(time-lag)를 두고 변화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코호트출산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체수준이하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궁극적으로 출산수준이 낮아지거나 높아지기보다는 여성들이 소득과 혜택을 최적화함으로써 출산시기 및 간격이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Andersson, 2005).⁴⁾

한편, 스웨덴의 결혼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으나(1997년 천명당 3.6명), 가족 형성에서 결혼의 역할은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결혼률 하락과 동시에 동거율이 증가하였으며, 아이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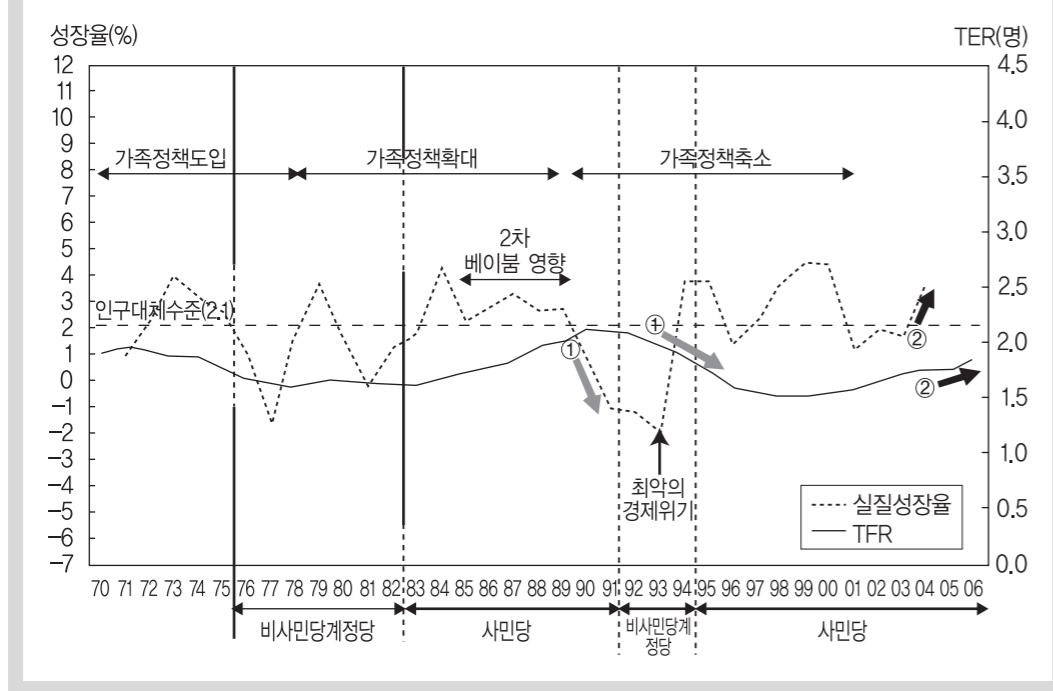
반 이상이 결혼을 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미혼모는 5~10% 정도). 중요한 것은 스웨덴에서는 일하는 어머니와 한부모가정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용적이다. 즉, 스웨덴에서의 평등한 성 역할은 스웨덴 사회가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있다.

2) 일본 사례

전후 베이비붐 기간(1947~1949)에 일본의 출산율은 1947년 4.54에서 1957년 2.04로 급격

4) Andersons(2003)는 출생코호트 변동분석을 통해 롤러코스터의 급변한 출산율이 단조롭게 변화함을 제시하여, 롤러코스터 변화가 출생코호트와 단기간 합계출산율 변동 결과로 간주하였다.

그림 2. 스웨덴의 경기변동과 합계출산율 관계, 1960-2005



한 속도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복구 등에 기인한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도 혼인건수 및 결혼률 감소로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였다. 1973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출산율은 더욱 감소하였는데, 경기 불황으로 여성고용률이 낮아지고, 그로 인하여 만혼화 경향이 증가한 결과이다(Retherford & Ogawa, 2005).

1980~1990년 기간 출산율 감소는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에 의한 고용기회 확대로 성 평등의식이 증가하여 여성들이 결혼을 연기하였기 때

문으로 설명되고 있다. 특히 1989년 출산율이 1.57까지 낮아지자, 정부는 1994년 엔젤 플랜(1995~1999)을 발표하여 일과 양육 그리고 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조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래 출산율은 더욱 감소하였는데, 거품경제 붕괴 후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평생직장 보장'이 사라지면서, 여성의 출산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Ogawa, 2003.⁵⁾ 경기불황은 임금노동자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고용불안은 여성교육 연장과 함께 만혼화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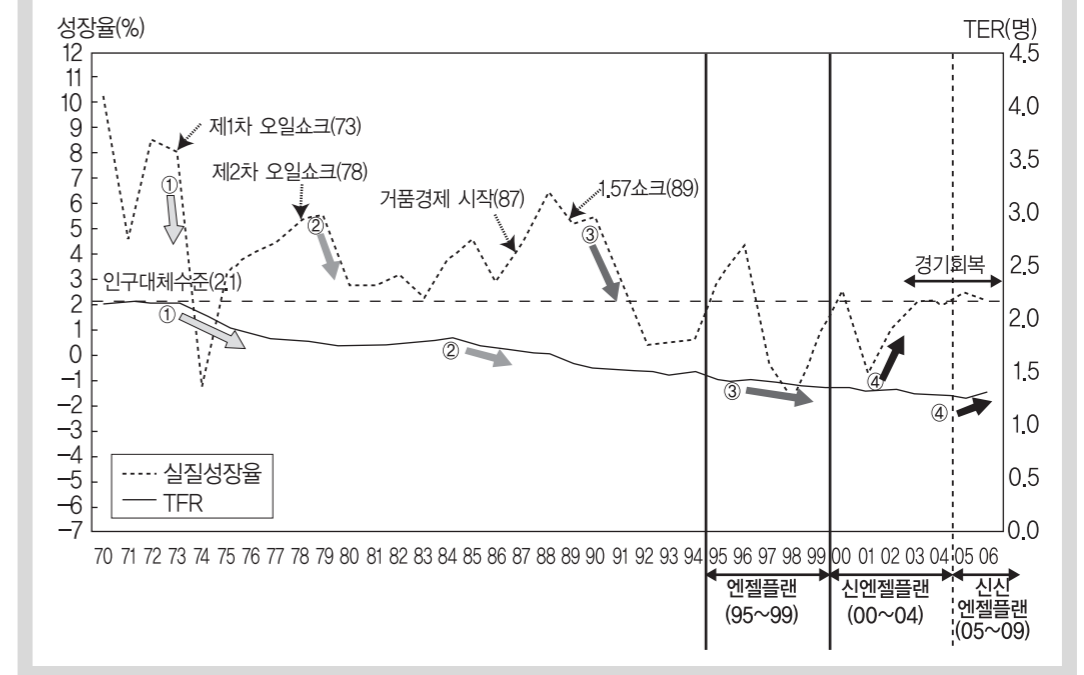
5)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46.6%에서 1990년 49.1%, 1996년 49.3%로 증가하다가, 감소하여 2006년에는 47.9%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정부는 1999년 신엔젤 플랜(2000~2004)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임금의 40%까지 증가시켰으며, 아동수당 대상을 3세 이하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확대하였었다. 2003년에는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제정을 통해 지방정부와 기업이 자체적으로 아동양육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하였다. 2004년에는 아동수당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였고, 신신엔젤 플랜(2005~2009)을 통해 아동보육 지원과 성 평등실현을 주요과제로 삼았다. 또한

젊은이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성의 육아휴직, 기업의 보육 시설 장려, 젊은이의 취업 경험기회 확대 등을 마련하였다.

2006년에 출산율은 2005년 1.26에서 2006년 1.32로 높아졌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경기 회복으로 인해 '젊은 세대의 생활 안정 및 아이를 낳아도 괜찮다'라는 의식이 증가하고,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라 고용이 안정(남성고용자, 정사원 증가 등)되어 20~30대에서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⁷⁾ 거품

그림 3. 일본의 합계출산율 및 경기변동간의 관계, 1970~2006



6)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1990년 37.4%, 1996년 47.6%, 2006년 51.0%로, 여성의 초혼연령은 1990년 24.8세에서 2006년 27.8세로 증가하였다.

7)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경기 회복으로 고용 사정이 좋아지면서 제2차 베이비붐 세대(1971~1974년생)를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 붕괴 후 장기 불황이 지속된 '취직 빙하기'엔 젊은 남녀들이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결혼을 연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풍조가 강했으나, 최근 고용환경 개선으로 뒤늦게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커플이 증가한 것이다. 일본에서 GDP 성장률과 출산율간에 약 4년간의 시차(time-lag)가 관찰된다.

3. 우리나라 출산 동향

1) 출산율 변동 추이

우리나라 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치수준에 도달한 이래,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 동안 1.6내외 수준에서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직

후인 1998년에 출산율은 1.47로 처음으로 1.5미만으로 떨어졌으나, 1999년 1.42, 2000년 1.47로 다소 안정세를 유지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출산율은 2001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출산율은 2001년에 1.3으로 2000년에 비해 0.17(11.6%) 감소하였으며, 출생아수는 약 8만명(12.6%)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2002년에 출산율은 전년보다 0.13이 더 낮은 1.17로 감소했으며, 출생아수는 처음으로 50만명 미만(전년 대비 6.3만명 또는 11.2%)으로 감소했다. 특히 2005년에 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보였으며, 출생아수도 처음으로 45만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06년에 출생아수가 45.2만명으로 2005년에 비해 14천명(3.2%)이 증가하였다. 이는 2000년 새천년 베이비붐(new millennium baby-boom)을 제외하면 1994년 이후 계속 감

소했던 것이 처음으로 증가세로 나타난 것이다. 출생아수 증가에 따라 2006년 출산율은 1.1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1.25로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2) 출산행태 변화

출산수준은 미시적 차원의 결혼 및 출산 행태에 의해 결정되며, 이들 행태는 거시적인 차원의 환경 변화 즉, 사회, 경제, 문화, 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가임기여성(15~49세) 규모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이들의 결혼은 2003년을 299천명을 저점으로 2006년

에 325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주된 출산연령층인 25~29세 여성은 2005년을 저점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들의 결혼은 이미 2004년을 저점으로 증가하였다. 30~34세 여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이들의 결혼은 지난 10년간 2배나 증가하였다. 최근 20대 결혼 증가에 따라,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은 1996년 25.5세에서 2003년 27.3세로 매년 0.2~0.4세씩 증가하였으나, 최근에 증가폭이 작아져(2005~2006년 0.1세) 만혼화 경향이 다소 주춤해졌다. 한편, 1997년 외환위기 이래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이혼은 2003년 167천명(조이혼률 3.5)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재혼도 증가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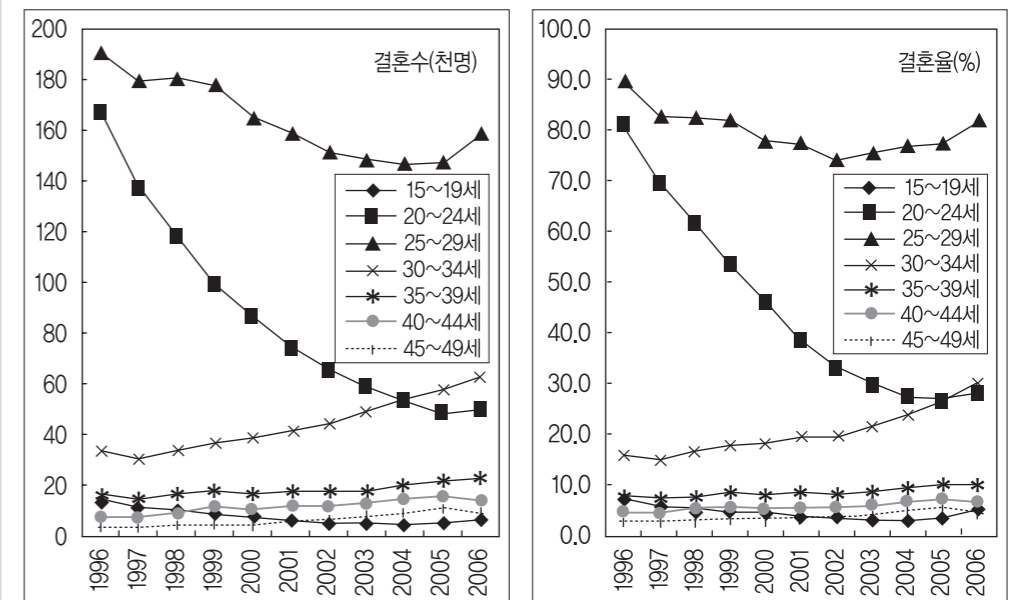
표 1. 우리나라 출산율 변동 추이

(단위: 천명,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게 될 평균 출생아수)

연도	출생아수(명)	합계 출산율	연도	출생아수(명)	합계 출산율	연도	출생아수(명)	합계 출산율
1970	1,006,645	4.53	1988	637,462	1.56	1998	642,972	1.47
1975	874,869	3.47	1989	646,197	1.58	1999	616,322	1.42
1980	865,350	2.83	1990	658,552	1.59	2000	636,780	1.47
1981	880,310	2.66	1991	718,279	1.74	2001	557,228	1.30
1982	858,832	2.42	1992	739,291	1.78	2002	494,625	1.17
1983	778,362	2.08	1993	723,934	1.67	2003	493,471	1.19
1984	682,217	1.76	1994	728,515	1.67	2004	476,052	1.16
1985	662,510	1.67	1995	721,074	1.65	2005	438,062	1.08
1986	641,644	1.60	1996	695,825	1.58	2006	451,514	1.13
1987	629,432	1.55	1997	678,402	1.54	2007(p)	480천명	1.25

자료: 통계청, KOSIS(2007년 추정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그림 4. 가임기(15~49세) 여성의 결혼수 및 결혼률



자료: 통계청, KOSIS.

있다. 이는 최근에 가족이 안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로 결혼률(여성 100명당 결혼수)도 1996년 3.3%에서 2003년 2.2%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2006년 2.4%로 상승하였다.

2006년 산모의 결혼 시기가 2006년인 경우는 전체 출생아의 6.8%, 2005년인 경우 24.5%, 2004년인 경우 15.6%, 2003년인 경우 13.9%, 2002년인 경우 11.1%, 2001년인 경우 8.3%, 2000년 이전인 경우 20.5%이다. 결혼 당해년 초산비율은 1996년 11.2%에서 2001년 8.1%까지 감소하다가, 2004년 10.5%, 2005년 11.6%, 2006년 12.3%로 점차 높아졌다. 즉, 2006년에 결혼해서 출산한 비율은 과거에 비해 결코 높지 않다. 이는 출생월 분포를 통해서도 알 수 있

다. 결혼 당해년에 출산하기 위해서는 임신기간을 고려하면 1~3월경에 결혼하여 10~12월경에 출산하여야 하나, 그 비율은 과거와 거의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이, 결혼 증가가 출산 증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나, 즉시적이기 보다 2~3년의 시차를 두고 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2006년 '쌍춘년' 효과가 2006년 출산 증가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신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효과도 출산의 연도별 분산-집중에 그칠 뿐, 중장기적으로 출산율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2006년 출산 증가에 대한 인구학적 요인의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2005~2006년간 연령별출산율 변화를 여성규

모, 결혼수, 출생아수 등의 변화로 분해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20대 초반에서는 여성규모(분모)가 감소하고 결혼도 누적적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출생아수(분자)가 감소하였으며, 출생아수 감소가 여성규모 감소폭보다 상대적으로 커 출산율도 감소하였다. 25~29세의 경우, 2006년에 여성규모와 결혼 모두 증가하였으나, 장기간에 걸쳐 결혼 감소가 누적된 결과 출생아수가 감소하여 출산율은 감소하였다. 30~34세의 경우, 여성규모가 감소한 반면 결혼이 누적적으로 증가한 결과, 출생아수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35~39세의 경우에는 여성규모가 증가한데다가 결혼이 누적적으로 증가하여 출생아수가 증가하였으며, 출산율도 상승하였다. 요컨대, 2006년 출산 증가에 30대 여성은 양(+)방향으로 기여한 반면, 20대 여성은 음(-)방향으로 기여하였다. 그리고 30대 기여도가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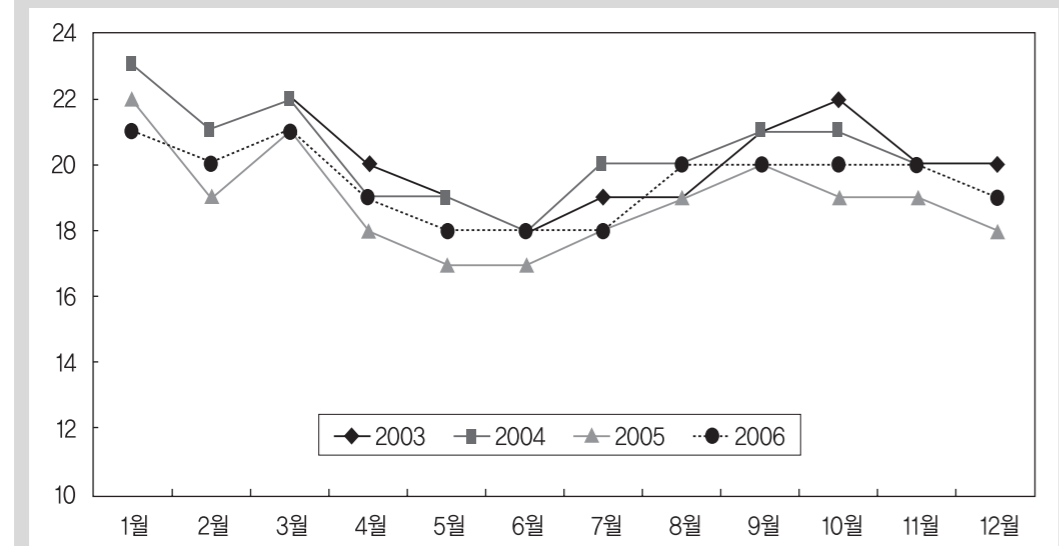
대 기여도보다 상대적으로 커,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4. 2006년 출산증가 원인 분석

1) 사회문화적 요인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는 결혼, 이혼, 가치관, 사회분위기 등을 들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결혼은 2003년을 저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된 출산연령층인 25~29세 여성의 결혼이 200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30~34세 여성의 경우 여성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대 결혼의 증가에 힘입어,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은 1996년 25.5세에서 2006년에 27.8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

그림 5. 연도별 출생아수의 월별 분포



자료: 통계청, KOSIS.

표 2. 2005~2006년간 출산율 변동의 인구학적 요소분해

(단위: 천명, 여성1천명당 출생아수)

연령	여성인구			결혼(누적)			출생아수			출산율		
	2005년	2006년	증감	00-04 결혼 코호트	01-05 결혼 코호트	증감	2005년	2006년	증감	2005년	2006년	증감
15-19	1,491.8	1,489.1	-2.8	4.3	4.7	0.4	3.1	3.2	0.1	2.1	2.2	0.1
20-24	1,809.4	1,718.3	-91.1	98.8	89.3	-9.5	32.9	30.8	-2.1	17.9	17.7	-0.2
25-29	1,864.0	1,887.0	23.0	594.3	554.0	-40.3	175.6	173.7	-1.8	92.3	89.9	-2.4
30-34	2,091.1	2,025.4	-65.7	564.0	565.1	1.1	178.8	189.5	10.7	82.4	90.2	7.8
35-39	2,071.7	2,106.2	34.5	145.1	159.2	14.2	41.0	47.6	6.6	19.0	21.5	2.5
40-44	2,079.0	2,041.5	-37.5	78.1	81.2	3.1	5.2	5.4	0.2	2.5	2.6	0.1
45-49	1,948.6	2,022.9	74.3	50.4	57.1	6.7	0.4	0.4	0.0	0.2	0.2	0.0
전체	13,355.6	13,290.4	-65.2	1,534.9	1,510.5	-24.4	437.0	450.6	13.6	1.08	1.13	0.05

주: 미상 처리 및 반올림으로 인하여 요소간 계산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 KOSIS.

나, 최근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어 만혼화 현상이 다소 둔화되었다. 이혼은 가족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출산을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이혼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2003년을 저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여 가족이 안정화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결혼과 자녀에 관한 긍정적인 가치관은 점차 낮아져왔으며,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결혼과 자녀에 관한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결혼필요성에 대한 기혼여성의 긍정적인

태도(반드시 해야함+하는 편이 좋음)는 2000년 55.6%에서 2003년 54.4%로 다소 낮아졌으나, 2006년에는 57.7%로 높아졌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자녀에 대한 기혼여성의 긍정적인 태도(반드시 가져야함+갖은 편이 좋음)는 1991년 90.3%에서 1997년 90.3%, 2000년 89.6%, 2003년 86.8%로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나, 2006년에는 87.9%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기혼여성의 이상 자녀수도 1997년 평균 2.3명에서 2000년과 2003년에 2.2명으로 낮아졌으나, 2006년에는 다시 2.3명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부부가 가사 또는 육아

를 공동으로 분담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 점은 특히 출산 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7년에 실시한 「2006년 전국출산동향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다법주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부가 육아를 공동으로 분담한 경우에 첫째아에서 둘째아로의 이행 확률이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남편의 육아 참여가 단산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추가 출산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셋째아 출산 이행에 대한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셋째아 출산이 보다 큰 사회경제적 부담을 요하는 만큼, 남편의 육아참여 이외에 경제적 지원 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2006년에 급격하게 남편의 육아 참여가 증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남편의 육아 참여가 둘째아 출산이행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최근에 정부가 저출산대책에서 부부간 양성 평등적 분업을 강조하고, 여성계 등에서 오랫동안 시민의식의 변화를 유도하여 온 노력과 연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향후 우리사회에서 성평등수준의 증가가 출산을 제고로 이어지는 새로운 기점을 찾을 수 있겠다.

2006년 전국출산동향조사 결과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한다”는 사회분위기에 대한 2006년 출산여성의 태도는 찬성 37.9%, 보통 42.6%, 반대 19.5%로 찬성이 반대보다 많으며, 보통을 긍정적인 태도로 간주할 경우 그 비율은 80%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006년 출산여성(응답자) 중 10.6%(큰 영향 0.5% 포함)가 다출산의 사회분위가 본인의 출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법주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다자녀의 사회적 분위기는 첫째아 출산 후 중단한 부부가 2006년에 둘째아 출산을 이행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둘째아에서 셋째아로의 출산이행에 대한 결과는 무의미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해도, 추가출산의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한다면, 그 이유만으로 추가 출산으로 이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언하면, 홍보활동 등에 의한 사회분위기도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자녀양육부담이 국가나 사회에 의해 적절하게 분담되지 않는다면, 사회분위기의 실효성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을 시사해 준다.

2) 경제적 요인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거시적인 접근은 지난 10년간 경기상황이 결혼율과 출산율의 변동 추이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제시해 준다.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 남녀 대졸자 모두 노동시장 상황이 호전되었을 경우 다음해의 혼인율을 크게 높였고, 소비자물가가 높았을 때 혼인율을 낮추는 영향을 미쳤다. 요컨대, 당해 연도와 1년 전의 경기 상황이 남녀의 혼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과 관

표 3.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자녀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반드시 가져야함	갖은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함	모르겠음	계(수)
1991	90.3	-	-	1.2	100.0(7,488)
1997	73.7	16.6	9.4	0.3	100.0(5,409)
2000	58.1	31.5	10.0	0.5	100.0(6,363)
2003	54.5	32.3	12.6	0.6	100.0(6,593)
2006	53.8	34.1	12.1	-	100.0(5,38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각연도.

표 4. 15세 이상 기혼부인의 결혼필요성에 관한 태도

(단위: %, 명)

	반드시 해야함	하는 편이 좋음	해도 좋고 하지않아도 좋음	하지않은 편이 좋음	모르겠음	계(수)
2000	26.2	29.4	38.2	5.4	0.8	100.0(10,601)
2003	25.7	28.7	37.1	7.9	0.7	100.0(11,145)
2006	27.9	29.8	38.2	4.0	-	100.0(9,69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각연도.

련해서는 경제성장률 상승은 이후의 출산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거시적인 접근은 경제성장률, 고용율, 혼인율, 출산율 등 종합적인 수준의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경기 변동에 대한 가구나 개인의 체감도를 반영하는데 미흡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시적인 접근방법으로 경기상황이 실제 여성(가구의) 의사결정과 출산행위를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2006년 출산여성의 16.2%가 경기상황이 2006년 출산 이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20대 저연령층, 저소득층, 둘째아 이상 출산, 그리고 취업여성에게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범주로지스틱분석 결과, 2006년에 첫째아에서 둘째아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경기상황에 대한 여성의 인식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셋째아 출산 이행에는 경기 상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자녀양육부담 등을 고려할 때 셋째아 출산으로의 이행은 어려운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의 경기 상황을 보통 이상이라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때에, 이전에 셋째아 출산을 계획하였거나 아니면 이미 둘째아에서 단산을 결정했던 여성(부부)들이 2006년에 셋째아 출산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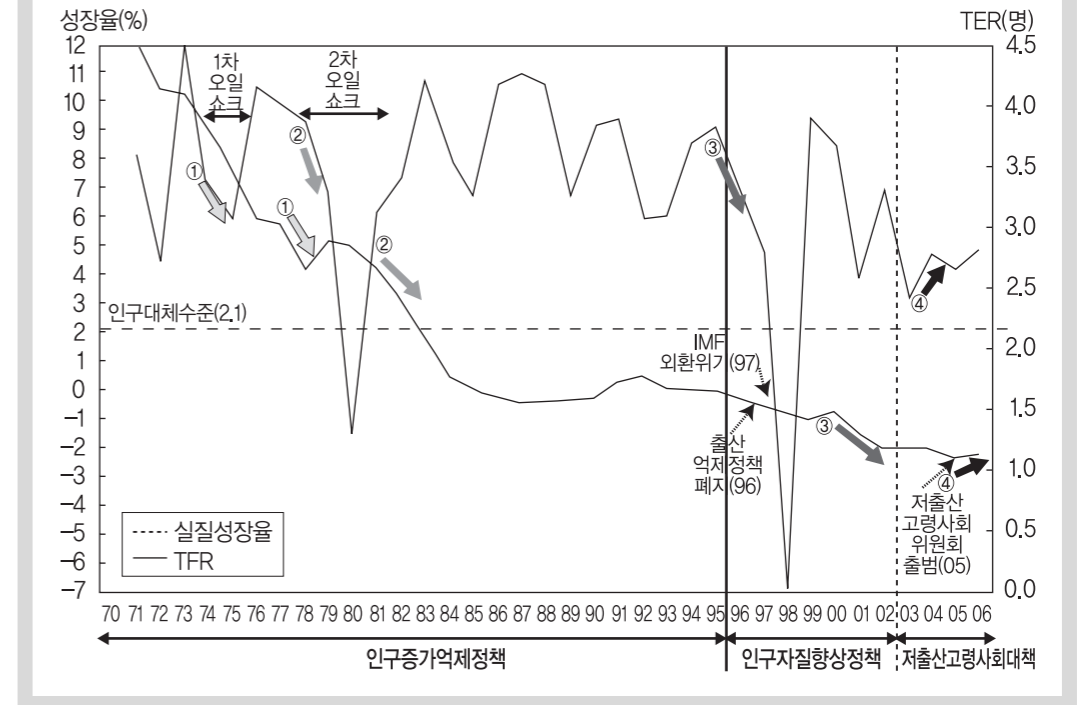
이와 같은 거시적 및 미시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변동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그림에서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출산율이 바로 낮아지기보다, 2001년부터 출산율 급감으로 나타난다. 한편, 경제성장률은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며, 출산율은 2005년 1.08로 최저 수준에 이른 후 2006년 1.13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전자의 출산율 급락 시기와 후자의 출산율 반등 시기는 경제성장률 급락과 경제성장률 증가 시기와 약 3년간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 실업과 고용불안정 및 소득불안정이 가구에 영향을 미쳐 결혼연기와 출산축소의 의사결정을 거쳐 전체적인 출산율 급락으로 이어지는데 3년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경기-출산간의 순환고리는 경제성장률 상승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 것이다. 즉, 경제성장률이 증가하여 고용환경이 개선되고 소득이 안정화되면, 이는 개인이나 가구의 결혼 및 출산 이행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이 행위로 이행하는데(특히 결혼에서 출산으로의 이행과 임신기간 등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경제성장률증가는 약 3년 시차를 두고 전체적인 출산 수준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정책적 요인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인구증가억제정책기, 인구자질향상정책기, 저출산고령사회대책기 세 시기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인구증가억제정책기(1961~1995)는 정부가 인구증가를 억제

그림 6. 우리나라 실질GDP성장률과 합계출산율의 변동 추이



하기 위해 가족계획 사업을 도입한 1961년부터 출산억제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한 1996년 직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된다.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3)는 정부가 인구의 자질과 복지향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공식 발표한 1996년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해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가 발족(2004년 2월)되기 직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대책기(2004~현재)는 정부가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로드맵(roadmap)을 설정한 2004년부터이다.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인 대응 노력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에는 정책의 법적 근거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였다. 2004년 이래 중앙부처 별로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저출산대책이 실시되었으며, 2006년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을 발표하여 범정부차원에서의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되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5년 동안에 약 18.9조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보육예산은 1996년 1,103억원에서 2006년 1조574억원으로 10배 증가하였으며, 복지재정비율은 1996년 19%에서 2006년

28%로 증가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기에서 저출산대책은 보육지원, 육아휴직, 아동보육과 같은 일과 가족 생활양립 지원, 산모나 영유아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등을 포함한다. 2006년 출산여성 중 4.3%가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정책별로는 일-가정양립 지원(2.1%), 보육교육비지원(1.2%), 사회보험 확대(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 출산여성의 특성별로는 고연령층(35~39세), 높은 출산순위(셋째아 이상), 중산층 이상, 취업여성일수록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영유아보육지원과 2006년 자녀출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녀 출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둘째 자녀 출산과 일과 가족생활 양립지원 정책과의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다른 정책들은 2006년 출산과의 관계성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많은 정책들이 2006년에야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 효과성이 나타나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2006년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들 정책들이 일부 계층에만 한정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또는 지원정도가 너무 낮아 일반 가구에서 체감하기에 미흡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정책별로 출산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자료를 축적한 후에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해당 정책이 출산과 양육지원에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5. 향후 전망과 정책적 함의

우리나라의 2006년 출산증가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1997년 외환위기에 기인한 경기불황은 3년의 시차를 두고 2001년부터 출산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영향은 2003년 이래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2002~2005년 기간에 가중되었다. 이는 경기 회복 - 고용 안정 - 결혼 및 출산 의사 결정 - 출산이행에 이르는 데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의 영향은 2003년부터 결혼 증가와 이혼 감소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에 이르러 출산 증가로 이어졌다. 2004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저출산정책도 경기회복과 어느 정도 상호작용을 하여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최근에 결혼과 출산에 관한 부정적인 가치관이 감소하였으며, 다자녀의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도 출산율 반등에 일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여건 변화의 영향은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경기 회복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결혼 증가가 누적되어 왔으며, 그러한 증가세는 2007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아주 낮은 수준에 있는 출산율은

어느 일정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출산율 회복세가 유지되고, 더 나아가 적정 수준으로 높아지기 위해서는 많은 여건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외부충격으로부터 가족생활 특히, 결혼, 출산, 자녀양육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수당 도입 등 자녀양육부담의 사회적 분담체계를 공고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경기순환과 연동하는 롤러코스트 형태로 장기적으로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감소세는 완만하게 진행되었다. 스웨덴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정책적 노력에 의해 양성평등문화에 기초한 자녀양육의 사회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진 데에 기인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1990년대 초이래 보육인프라 확충, 일-가정양립 제고, 가족친화적 고용문화 조성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불황이 가족생활영역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였고, 그 결과 출산율이 급락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경기변동 등 외부 충격에 대해 완충 역할을 할 자녀양육의 사회안전망이 전혀 구축되지 못했던 결과이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과 정책적 노력만으로 출산율을 프랑스 등과 같이 인구대치수준까지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일본이나 독일 및 남부유럽국가들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경기호전이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일정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독일, 이태리 등은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주부는 자녀양육에 전념하는 전통적 가족지원제도를 고수한 결과 출산율이 장기간 1.4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와 달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양성평등이 생활화된 국가들의 출산율은 1.6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2005년 우리나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맞벌이부부의 경우 32분(부인 3시간28분), 남편일인생계모형인 경우 31분(부인 6시간25분)으로 세계에서 최저인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관련, 우리 사회에서도 성평등적 역할의 가족문화 조성, 가족친화적 고용문화 조성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여기에는 기업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가족(미혼모·부, 동거부부, 재혼가정 등)에 대한 포용 및 차별 해소가 출산율 제고에 필수적이다. 스웨덴이나 프랑스 등 서구에서 1.8 이상의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다양한가족을 사회문화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유럽이나 북유럽 국가의 경우 혼외출산율이 50% 내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5%(2006년)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의 경우 동거부부, 미혼모 등의 임신 대부분이 사회적 냉대와 제도적 차별 등으로 인하여 낙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인공임신중절(낙태)로 소모된 임신건수가 전체 출생아수와 유사한 점은 법률혼

이외 가족생활을 사회문화적으로 배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국제 결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등이 증가하여, 전체 이민자가 70만명까지 증가하였다. 향후에도 세계화 추세로 그리고 국내의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여

러 형태의 이민자 유입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적 수용은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실제 미국, 캐나다 등 다문화국가들의 출산율은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로 인구대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보건복지**